

한경 BUSI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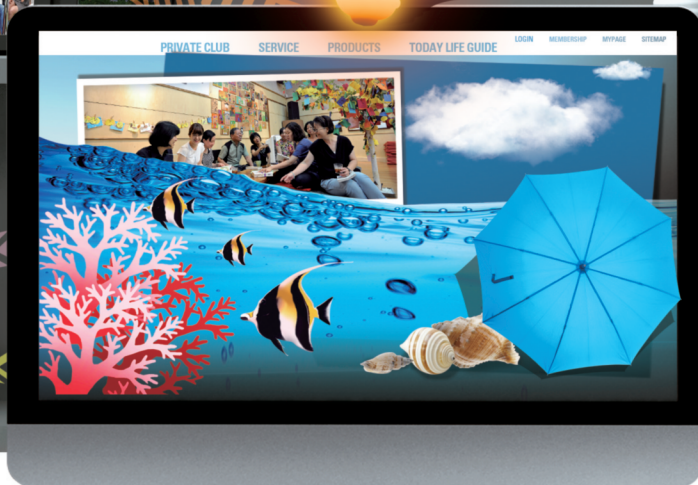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중국 부동산 시장 반등 시점은
인기 고는 해외채권 투자 주의점
직장인들이 꿈은 투잡 베스트 8

꿈의 직장, 괴짜 기업들의 유쾌한 반란

사그라지는 이민 열풍 왜?

탈도시화 시대 돈 되는 뉴 비즈니스
질주 시작한 독일 폭스바겐의 비밀
매각 앞둔 대우일렉, 옛 명성 회복할까



값 4,000원



한국경제신문



에너지산업 분야 규제 도입한 인도네시아

사회·환경적 책임 법령상 의무 규정

권용숙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인도네시아 정부가 에너지 자원 산업 분야에 관한 법령을 무리하게 빈번히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에너지 자원 기업에 기업의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이하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정부령 2012년 제47호가 제정됐다. 이 정부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회사법 제74조 제4항의 이행 법령 형식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대상은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과 천연자원과 관련된 기업이다.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Mauritius)는 1995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도입한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기업에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해 수익의 2% 상당을 회사 내에 적립할 의무를 부과했고 이러한 의무 수행을 감독할 국가 기관(CSR Committee)을 설립했으며 해당 기업들은 매 6개월마다 의무 이행 사항을 감독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강제 시스템을 두고 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법령상 도입한 사회적 책임은 성격 면에서는 법적 의무에 해당하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모리셔스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당장 심각한 부담을 지우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 정부령 제3조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과 '천연자원과 관련된 기업'을 사회적 책임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각 법령에 따라 관련 의무가 부과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새 정부령 적용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원 관련 법령상 사회 및 환경적 책임을 부과 받은 기업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각종 에너지, 천연자원 및 환경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업 외에도 위 분야와 간접적으로 연관된 기업까지도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새 법령은 그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문제 외에도 관련 기업에 사회적 책임의 본래적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의무를 지우는 장치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즉 새 법령 제5조에 따르면 기업은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및 이행

사항을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것과 주주총회에 보고할 것까지만 요구하고 있을 뿐, 모리셔스와 같은 기업 수익의 일정액을 적립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감독할 기관을 설치하지도 않고 있으며 제5조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다.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범위'라는 기준도 자의적이어서 기업이 얼마든지 의무를 회피해 갈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그 결과 현실적으로 새 법령이 관련 기업들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이나 법령 위반의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기존 정부령 제93호는 기업의 재난 구호, 교육, 체육, 사회 기반 시설 등에 대한 투자나 활동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에서 세금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새 법령은 실질적으로 각 기업에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촉진할 정도의 장치를 도입하지 못해 당초의 법령 도입 목적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독 에너지 및 천연자원 관련 산업에 대해서만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령상 의무로 도입한 것은 주목할 만하며 자원 보호주의와 맞물려 향후 사회적 책임이 어떤 방향으로 강화될지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에너지 자원 기업의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을 법령으로 제정했다. 사진은 인도네시아 석탄 광구.